전북자치도의회 농복환위 의원들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원들

"국민과 농업 무시한 尹, 탄핵하라"

"농망4법 운운 내란 조력 농식품부장관 파면"도 주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파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도의회 정문 앞에서 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소속 의원 8명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 소속 회원 등 30여명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농망 4법 운운 내란 조력 하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북농업인 단체연합회 노창득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그 다음날 4시 30분까지의 6시간의 사태를 보면 과연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5번이나 행사하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민의 기본권에 위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헌법적이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송미령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고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대통령이 힘들어하는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린 도의원은 "이게 나라냐?"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말고 밭을 갈아엎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에 앞장서서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에게도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북농업인 단체연합회 노창득 회장은 "지난 3일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1970년 80년대나 있을 법한 '종북 세력 척결 헌정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해산을 위해 건물 봉쇄, 의원 체포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 선관위 서버 탈취를 목적으로 계엄군을 침투시켰고, 비상계엄령 이후 제1 포고령을 발표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지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였다는 얼토 당토하지 이유로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짓밟았다. 국민 누구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가 없다."고 하며, "또한 국회의원 누구도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로지 윤석열 본인이 자기 세상에 갇혀 똘똘 뭉친 고집과 오만으로 입맛에 맞는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내 편 네 편을 가리더니 결국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 오현숙 도의원은 "정부여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또 어떠한가?"라며 "처음에는 위헌 계엄이고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니 여당도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막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가 하루아침에 탄핵 투표 반대 당론을 주장하며 단체퇴장하였고, 결국 K팝, K무비, K푸드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는 이제 국무총리와 함께 질서있는 퇴진을 계획한다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섭지 아니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며, "이제 내란 공동정범인 국힘당은 더 이상 국민 정당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오은미 도의원은 "농업 농촌 농업인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계엄을 알았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지만, 뒤돌아보면 본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모르쇠로 짓뭉개기 일쑤였다"라며, "쌀값이 붕괴되어 쌀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던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 공약에 '난 약속한 적 없다'며 농민을 우롱하던 모습이 함께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농민 죽이기에 철저하게 조력해 온 하수인이 바로 송미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충식 전북농민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짓밟은 극악무도한 자, 또한 그들을 옹호하고 두둔한 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농망4법 운운하며 내란을 조력해 온 하수인 송미령을 파면하라. 내란 부역 집단 공동정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위원장인 임승식 도의원과 부위원장인 권요안 도의원, 국주영은 전 도의장, 김정수 오은미 오현숙 이정린 황영석 도의원이다.

또한, 이날 참석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농촌지도자, 4H전북본부, 한농연, 전농, 전여농, 한우협회, 친농협, 가농, 한돈협회, 낙농협회, 산란계협회, 생활개선회, 쌀협회, 쌀전업농 등 15개 단체 소속 회원이다.

/이만호 기자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 탄핵을 외치고 있다.

"尹·내란 공범 탄핵하라"

도의회, 야3당 참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오전 이명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3당 소속 도의원들 참여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야 3당 소속 도의원들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장삼이사의 도덕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민족애국지사의 흔적 제거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반민족적 처사, 대통령 가족의 사익 추구 의혹, 거부권 남발을 통한 삼권분립 취지 훼손, 숙의과정을 생략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언론탄압과 공천개입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듯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그런데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간의 천박한 행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마저 서슴치 않았다."며,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친 것이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니,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그대로 둘 경우, 국격의 추락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2022년 취임 당시 헌법의 대통령 취임 선서문 즉,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민과의 숭고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여 선조들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나라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총의를 모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즉각 탄핵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9명이 10일 도의회에서 강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등 9개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태창 도의원을 포함한 29명의 도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은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박탈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공범임을 자임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 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국무총리와 당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질서있는 퇴진인가!"라며, "누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말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며 탄핵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라며, "이는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플레이션 대응 대체식품 개발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확산과 식품 소비 행태변화에 따라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농산물의 생산환경과 소비시장의 행태변화가 새로운 식품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와 맞물려 전북자치도의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친환경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농식품산업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는 폭염·폭우 등의 변칙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기상현상을 발생시킨다.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가 높았으며 5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으며 장마철 강우량의 커다란 변동성과 잦은 국지성 호우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이상기후·미기후의 발생은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에 변동성을 일으키며 소비시장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2024년 전북자치도의 여름 평균 최고기온이 전년의 31.1℃에서 34.0℃로 상승했으며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3.5%로 올랐다. 이것은 같은 해 9월까지의 월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보다 6.2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2024년 2월에 발간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국가 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1차산업 생산력 감소는 농업 생산활동의 감소와 함께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질 것을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은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산업에 대한 수요는 물론 소비자들의 친환경 대체식품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다.

친환경 대체식품 개발은 식품의 생산·가공 방식 개선과 친환경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주요 목적이며 이러한 식품 제조 환경은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 감소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푸드업사이클링을 통해 더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대체식품은 단백질 공급수단을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과 인공적인 배양육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동물성 원료를 통한 단백질 공급을 대체 원료를 활용한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을 나타낸다.

현재는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식품이 대체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배양육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 배양육은 2040년을 기준으로 육류소비의 약 3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92%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만호 기자

계엄 선포·해제 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민주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발의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 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힘 호남동행특위 해체하라"

도의회, 장연국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결의안 채택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사태에 따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의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여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장연국·이명연·이정린·박정희·김정기·이병도·오은미·서난이·정종복·김성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헌법을 짓밟은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와중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몰염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 표결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작태는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악화시킨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키우는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헌법에 따른 헌정질서 유지 노력마저 방해한다면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호소할 자격이 없음을 모르는 것인가?라며, "이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소멸된 바, 우리는 이러한 반민주적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헌법유린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내란 수괴와 함께 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인 호남과 동행할 자격이 없으며, 전북과 전남, 광주의 500만 호남인은 무자격자와의 동행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도의원들은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극단의 정치지형 속에서 통합과 상생의 여지를 모색해 보고자 결성되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 비루한 수명을 다하고 '호남동행'이라는 간판을 내릴 때가 되었으니,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외면하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짓밟은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호남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